

광주시, 동절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4~29일 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반 운영
복지시설·키즈카페·롤러스케이팅장·캠핑장 등 67곳

광주시는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실내 놀이시설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키즈카페·실내 롤러스케이팅장·캠핑장 등 67곳이다.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자치구·민간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

화 장비·방화구획과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누전차단기 작동여부와 전기·기계설 등 유지관리 상태 ▲소방·전기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와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와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관리주체에 이달 맡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안부장관상

‘고치려 간담게’ 방치자전거 재활용 우수사례



광주시 서구의 자전거 수리 서비스 브랜드 ‘고치려 간담게’가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자치단체별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2차례의 심사를 거쳐 1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서구는 찾아가는 서비스 ‘고치려 간담게’와 민·관 협업을 통한 방치자전거 재활용이 큰 점수를 받아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고치려간담게’는 2010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13년째 운영 중인 사업을 올해 브랜드인 것으로 등별로 주민 접근이 편리한 거점을 순회하며 자전거 수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 점검과 간단한 정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구는 관내에서 활동중인 청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방치자전거 소모품을 이용한 폐달 발전기 제작 등 거리에 버려진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해 탄소중립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마을 변화 이끈 공동체 한자리에’

광산마을공동체 한마당, 136개 공동체 성과·활동 공유



광산구는 지난 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마을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2023년 광산마을공동체 한마당’이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화, 복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의 변화를 이끈 광산구 136개 공동체의 한 해 성과와 활동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산공동체를 소개하고, 활동 모습을 담은 공유마당,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마당, 공동체 화합의 장인 어울마당이 진행됐다.

공유마당에서는 2023년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에 대한 소개가 담긴 게시물과 비누, 고추장, 고체 치약 등 성과물을 전시했다.

여는마당에서는 SWA, YCM양상을, 한울타리 등 문화 활동 공동체가 직접 공연을 선보였다. 공동체의 활동모습과 활동소감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였다.

어울마당에서는 공동체 연대감과 친밀감을 강화하는 ‘힐내라 공동체! 으랏차차 광산’ 활동을 하며 2024년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동기 기자

‘6년간 후원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대표 징유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후원금을 6년 동안 횡령한 재단 대표와 산하기관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법인 모 재단 대표 A(91·여씨)와 재단 산하 기관 원장 B(54·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공모해 재단 비지정후원금 5717만 원을 100차례에 걸쳐 대표 A에게 지급,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부당 지출 기간·금액에 비해 A·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출이 이뤄진 점, A씨가 횡령 기간 지급받은 급여 등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로 재단에 기부금을 낸 점, B씨는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과 상위권대 수시 탈락 늘어날 듯”

8일 수능 성적 발표…정시 경쟁 치열 전망

서울 주요 41개 대학 자연계열 지원자 급증

이번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서울 주요 대학 수시에서 자연계열 지원자가 크게 늘어 정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지겠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41개 대학의 수시 총원사접수 건수에서 모집정원을 차감한 ‘탈락 규모’는 전년도와 견줘 5만 343명 늘어났다.

계열별로 자연계열의 탈락 규모가 4만 2133명(13.3%) 늘어난 데 반해 인문계열은 8210명(2.7%)에 그쳤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소위 ‘SKY’)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소위 ‘탈락 규모’는 전년도와 견줘 자연계열 5759명(16.0%), 인문계

열 1643명(5.5%) 늘었다.

이 자료는 실제 수시 탈락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수험생 한 명당 최대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지원한 사례가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도 학원 측은 자연계열 탈락 규모가 인문계열보다 많아진 점에 주목한다.

자연계열에 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것으로 그만큼 수시 탈락자가 많아져 정시 경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차적 원인으로는 국어·수학에서 공통+선택과목 형태의 통합형 수능 체제가 꼽힌다.

수학 ‘미적분’을 택한 이과 지망 수험생이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분석

시민대책위,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 총장 해임안 상정에 ‘격분’

“이사회는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통탄할 지경” 유감 표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정상화 총장 나주 시민대책위가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을 권해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회는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종순 위원장은 1일 대책위 보도 자료를 통해 “산업부 감사 지적사항은 대학 초기 불안정한 시스템, 제도 규정 등 미비 등으로 어느 기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교직원들의 도덕적 일탈까지 덮여줘 대학 초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사회를 동원해 해임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된 정치 공작”이라며 이사회 결정을 작심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켄텍이 호남권이 아닌 충청권, 영남권에 있었어도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었을지 의문스럽다”며 “개교 2년차에도 불구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총장 해임 요구와 더불어 대학 출연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아 대학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작태는 전 정권 지우기이자 심각한 지

이 나온 이후 매년 선택과목 풀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다만 2023학년도 수시에서는 주요 대학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 지원자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통합형 수능 만으로 원인을 결론 내리기 어렵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내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 하에 연쇄적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라며 “잘만하면 3~4등급대 학생들도 서울 중위권 대학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내년에 비슷한 성적을 받아도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해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소신 지원’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이야기다.

수능 성적표는 오는 8일 나온다. 다수 입시기관은 출제분부가 일명 ‘킬러문항’을 배제했음에도 주요 영

역에서 예년보다 훨씬 어려운 ‘불수능’을 내놨다고 분석했던 바 있다.

성적표가 나오면 수시 지원 자격인 ‘수능 최저학력기준’(특정 과목들의 등급 합도 결론 나는 만큼 주요 대학의 합격자 발표도 시작된다.

오는 15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중앙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이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시 지원자가 늘어난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서는 소신 지원 경향과 ‘불수능’ 채점 결과가 겹치며 표준점수 합격 커트라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대표는 “올해 수능 국어, 수학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나오면 상위권의 수능 점수 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이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정시 소신 지원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뉴스

북구 ‘동절기 주민생활안정’ 역량 집중…내년 2월까지

북구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북구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북구의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은 동절기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갑절별 예방 ▲재난·재해 대비 등 3대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됐다.

먼저 코로나19, 독감 등 겨울철 유행하기 쉬운 호흡기 질환의 지역 확산을 차단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상시 상황 관리 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숙인 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며 거동 불편 노인,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도시락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대상자별 촘촘한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3만여 포기의 ‘갑절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사회 사랑과 전하는 한편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보일러 점검,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

광주시교육청, 취약계층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취약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번달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법률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출서류 작성, 제출 서류 작성, 의견 진술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 제75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운영

교원 인권탐방·일하는 청소년 위한 토크 콘서트 등

광주시교육청이 1~10일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주간행사는 1948년 12월 10일 있었던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해 시교육청을 비롯해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청소년 공감 토크 콘서트’, ‘교실에서 배우는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세가지 행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오후 5시 광주학생예술누리터 꿈이룸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공감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 노동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에 공감하고

자 마련됐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 권영국 변호사 초청 강연 ▲일하는 청소년 할 말 i수다 활동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공감대 형성과 노동인권감수성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궁금한 내용은 전화(062)380-4597)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 오는 4~8일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배우는 세계인권선언’ 수업이 4개 중학교에서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세계인권선언 교육키트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한다.

동구 양성평등 정책 대상 복지부장관상·市 ‘최우수’ 선정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높이 평가…여성 친화 정책 ‘검경사’

동구가 최근 제1회 양성평등 정책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2023년 자치구 양성평등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겹경사 소식을 알렸다.

최우수 자치구 선정은 올해 광주 5개 자치구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결정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

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여성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등 총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동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성과에서 동구는 ▲여성의 역량 강화 거점 공간인 여성 희망창작소 운영 ▲동구만세(동구여성이 만드는 세상) 성평등 마을 육성 ▲마을 여성 아카데미 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

가받았다.

또한 동구만세 플리마켓을 통한 공동체 기반의 여성 창업 사례 발굴, 인건 취약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 등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조성과 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이 ‘최우수’ 자치구 선정의 주요 요인이 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평가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동구의 자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였다”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